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01
------	------

발의일자 : 2023. 2. 6.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 장규권, 이인식의원

##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확대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출산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 6개월 전 주민등록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경과 시 지원

나. 지원 기준 및 출산지원금을 변경함(안 제4조).

부 또는 모가 장애인  
: 50만 원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100만 원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3. 2. 7 ~ 2. 13.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산”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50만원
2.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100만원

②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

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조례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